

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
(주요정책 부문)

2022. 3.

법 무 부

법 무 부

I. 평가개요

□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

- 평가대상 : 총 47개 부서 59개 관리과제
- 평가지표

평가항목	평 가 지 표	측 정 방 법
계획수립의 적절성(15)	계획수립의 충실성	○ 사전 조사 및 의견수렴 여부, 과제추진 계획의 적절성
	성과지표의 적절성	○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
시행과정의 적절성 (10)	추진일정의 충실성	○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
	협업 노력도	○ 관련 기관·부서와 유기적 협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수범 사례
정책 효과성 (60)	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	○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
	정책 효과성	○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등 발생 여부
정책 소통의 충실성 (15)	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	○ 정책의 집행 등 정책 추진 단계별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정도
	홍보 노력도	○ 방송, 언론보도 등 홍보 실적 및 홍보 우수사례
	자체평가 역량 제고 노력도	○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의 충실성 등 ○ 제공 자료 내용의 충실성 등
가점(6)	국정과제·전략목표 반영도	○ 국정과제 및 전략목표와 관리과제 간 연관성 및 기여도
	미흡과제 개선 노력도	○ 전년도 하위 등급(미흡~부진) 과제에 대한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여부
	기관장 노력도	○ 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장(장·차관) 실적
	정책 개선의견 반영도	○ 평가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등

II. 평가결과

(1) 총 평

법무부는 '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,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'을 법무행정 비전으로, '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' 등 5대 전략목표와 '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적폐청산의 차질 없는 추진' 등 12개 성과목표 하위의 59개 관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

- 2021년 총 47개 부서의 59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,
 - 매우우수 3개(5%), 우수 9개(15%), 다소우수 8개(14%), 보통 19개(32%), 다소미흡 9개(15%), 미흡 9개(15%), 부진 3개(5%)로 나타남
 - 매우우수한 과제는 '성폭력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' 등 3개 과제, 우수한 과제는 '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' 등 10개 과제이며, '채권추심법 개정' 등 3개 과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
 - 전략목표별 평가 결과는 ①'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', ②'사회통합과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 법무정책 추진', ③'인권의 가치 중시 및 약자 보호·지원', ④'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', ⑤'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' 순임

- 총 59개 관리과제의 117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결과,
 - 전체 117개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7.3%로
 - 102개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100% 이상 충실히 달성
 - 다만, 15개 성과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·행사 차질, 국회 논의 지연 등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

(2) 주요성과

□ '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' 등 3개 과제는 '매우 우수'한 것으로 평가

○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

- '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' 도입 및 '신속수사팀' 신설, '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 강화' 등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안정적으로 관리

※ 특정범죄 재범률 : '19년 1.97% → '20년 1.68% → '21년 1.65%

-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 '안전귀가서비스'를 연계한 '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' 구축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긴급상황 대응강화

○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

- 「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한 벌금 전입비율 상향(6→8%)으로 '범죄피해자보호기금' 재원을 전년 대비 **29% 확충**(824억원→1,060억원)

-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이 어려워져 **화상상담**을 전년도 대비 **6배 이상**(2,568→16,365건) 전면 확대 시행

※ 취약계층이 PC·모바일 등을 이용한 화상상담을 통해 주거지 내에서도 실시간 법률상담 가능

○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

- 법무부 '교정홍보대사' 위촉, '교정정책에 대한 유튜브 영상 제작'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

※ 온라인 홍보채널 구독자·팔로우 수 전년도 대비 대폭(45%) 증가

- 'UCC 대국민 공모전('21. 8.)' 및 수용자 대상 '수용생활 카툰 공모전('21. 10.)'을 개최하여 수상작을 온·오프라인으로 홍보

※ 공모 주제 : (대국민)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, (수용자) 수용 생활 중 변화된 삶

□ '공증제도 활성화' 등 9개 과제는 '우수'한 것으로 평가

- 대부 계약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국회 제출('22. 1.), 본인인증수단에 여권진위확인시스템 도입 등으로 화상공증 이용 건수 전년 대비 40% 이상 증가, 부적정 공증사무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징계(공증인 징계위원회)를 통한 대국민 공증 신뢰도 제고
 - ※ '21. 2. 징계대상자 38명에 대하여 과태료(15명), 견책(23명) 등 징계 의결
- 집담감염에 취약한 수용시설의 실태에 맞는 '코로나19 대응지침'을 수립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, 매월 '의무점검 테마'(집중호우·태풍·화재 등)를 선정하여 계절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에 법무시설을 선제 점검
-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'사공일가 TF'를 구축, '동물은 물건이 아니다'는 내용의 「민법」 개정안 국회제출('21. 10.) 및 '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'하는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사법 개정안 후속입법 추진
 - ※ 사공일가(사회적 공존, 1인가구) TF : 국내·외에서 1인가구를 경험한 소설가, 배우, 다큐PD, 교사, 교수, 변호사, 검사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 구성
- 사회경력 단절, 직업능력 부족 등으로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출소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질적·양적 확대 추진을 통해 출소자가 재범의 악순환에서 취업의 선순환으로 전환하여 따뜻한 사회 구현에 기여
 - ※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 계획인원 '20년(6,500명) 대비 500명(7,000명) 증가
- 과밀 수용해소를 위한 거창구치소 등 7개 신축사업과 원주교도소 등 7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완공된 대구교도소 배수시설을 추가보완 하는 등 수용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
 - ※ 신축(7개소) : 거창구치소, 남원·화성여자·태백교도소, 경기북부·광주·대전구치소
 - ※ 이전(7개소) : 원주·대전·전주·창원·안양·부산교도소, 부산구치소

- 경제적 곤란, 질병, 법률문제 등으로 복합적 위기를 겪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**1:1 맞춤형 법률지원**을 제공하는 '**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**' 제도 정식 도입 및 확대 시행
 - ※ 지원 대상인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전문가를 1:1로 매칭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실질화함('21년,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43명의 지원 변호인 위촉, 북한이탈주민 27명 지원)
- **소년원의 코로나19 방역**을 위해 신규 입원소년 전원에 대한 PCR 검사 실시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소년원 직원 백신 우선 접종, 방역단계별 자체 매뉴얼 마련, 주기적인 대응훈련 실시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**감염병 확산 위기**에 성공적으로 대응
 - ※ 질병관리청과 협업을 통해 소년원 직원 1,090명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정
-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**농어촌 및 산업현장에 외국인력**을 지원하였으며,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**비자신청센터 확대** 등 개방적이고 질서 있는 비자·체류정책을 추진
 - ※ '21. 4. 13. ~ 12. 31.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1년 일괄 연장 조치('21.4.)
- **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신설(F-2),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기 사회정착 교육** 등 포용적 외국인정책을 통해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·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
 - ※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신설을 통해 9명의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적법한 체류자격 부여

(3) 개선·보완 사항

- '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·감독 제도 마련' 등 9개 과제는 '미흡', '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' 등 3개 과제는 '부진'한 것으로 평가
- 국고손실 환수소송에는 소송을 수행하게 될 소관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기에, 적극적 소 제기 및 수행을 위해 각 부처 소송 총괄관 회의를 통해 환수 업무 소개 및 협력 당부 예정
- 실질적인 검·경 수사권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변화된 수사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나는 미비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이행 추진
- 법조비리에 대한 지속적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건 알선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범죄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직역별 숨은 비리에 엄정 대응 예정
-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 등은 전국 단위로 조직적으로 은밀히 진행되므로 세무자료상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필요
 - ※ 서울남부지검에 '금융·증권범죄 수사협력단'을 설치('21. 9.)하여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·증권범죄에 집중 대응
- 범죄의 국제화 현상 등으로 인해 외국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,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으로 긴밀한 협업에 어려움 존재
 - ※ 2021년 1,026건의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국외 도피사범 64명 국내 송환
-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 및 수사결과 발표 등 홍보활동을 통해 부패척결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
 - ※ 2021년 5대 중대 부패 범죄 305명 기소, 95명 구속

- 선거 당선무효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사건이 법정기한 내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 하되,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
 - ※ 수사 착수와 진행,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'검찰시민위원회' 등 적극 활용
-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·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증가에 따라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'특허수사 자문위원회' 운영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단속의 전문성 제고 필요
- '긴급통신 제한조치의 법원 사후허가 필수화'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통신비밀보호법」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
 - ※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주장 적극 반영 및 대검·경찰·국정원·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긴급통신제한조치 실시 후 반드시 법원에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'21. 3. 11. 국회 제출
- 소액채무자 보호를 위한 '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금지'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채권추심법」의 조속한 개정 필요
 - ※ 법무부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본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에 7회 설명하는 등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
-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·인권 중심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·운영 필요
 - ※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의 필요성, 통제 및 점검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관련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
-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및 관련자들의 실형 선고를 위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
 - ※ 현재,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총 45명 중 36명 판결 확정(35명 유죄)